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자 료</h1> 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">  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2020.6.8.(월) 조간	배포	2020.6.5.(금)	
책 임 자	금융위 감독제도팀장 손 성 은(02-2100-2591)	담 당 자	박 경 덕 사무관 (02-2100-2592) 이 은 진 사무관 (02-2100-2593)		
	금융위 지배구조팀장 이 인 옥(02-2100-2520)		반 준 성 사무관 (02-2100-2525) 김 영 석 사무관 (02-2100-2592)		
	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 박 상 원(02-3145-8200)		장 항 필 팀 장 (02-3145-8204)		

제 목 :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입법예고

-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('20.6.5~7.15)
→ 관련 절차를 거쳐 금년 9월중 국회제출 예정
- **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의견, 당국·업계의 경험, 국제정합성 등을 법안에 반영**
 -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**非지주 금융그룹등에 대한 금융그룹감독 법적근거 마련**
 - 금융그룹 차원의 **자본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**된 경우 금융위는 대표회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 **건전성 개선조치 실시**

I 추진 배경

- 금융그룹감독제도는 '국제적 감독규범*'으로서 미국·유럽·호주·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·운영되고 있습니다.

* '99년 국제 금융감독협의회(Joint Forum) 감독원칙 공개 이후 미국·유럽·일본등에서 도입

-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「금융지주회사법」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- 그러나, '非지주 금융그룹'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함*에도 불구하고,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.

* 모범규준대상 6개 금융그룹 금융자산은 약900조원, 전체금융회사의 18% ('18년말)

- 금년 4월, 국제통화기금(IMF)은 '14년에 이어서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(FSAP)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,
- 금융지주와의 규제 비대칭성 해소 등을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,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*한 바 있습니다.

* ① 非지주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 감독의 법적근거 미비, ② 非지주 금융그룹 건전성규제 강화, 그룹차원의 정보공개, 적절한 지배구조 구축 ③ 금융그룹 감독 조직의 규모에 대한 지적 및 금융그룹감독 강화·확대, 감독수단 정교화 권고 등

2 추진 경과

- 現 정부 출범과 함께 '금융그룹감독'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('17.7)된 바 있으며,

※ (국정과제 24-4)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마련·시행

- 통합감독 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 수립 (그룹내 금융자산 규모, 금융권역별 비중 등 고려)
- 금융그룹 단위로 필요자본 이상의 적격 자기자본(계열사간 출자분 제외) 규제 도입
- 대주주·계열사 우회지원 등 내부거래 규제 강화
- 그룹별 대표회사의 주요 감독사항 보고·공시

- 금융위원회는 '18.7월 「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기준」을 제정하고 금융그룹감독 제도를 시범운영* 해오고 있습니다.

* 최초 교보·미래에셋·삼성·롯데·한화현대차DB 등 7개 금융그룹 지정(롯데는 19.12 제외)

◆ [참고] 현행 「모범기준」 주요내용

- ① (감독대상 지정)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* 중 감독실익이 있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
- ② (그룹 위험관리·내부통제체계 구축) 금융그룹내 대표회사를 선정, 대표회사는 위험관리·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
 -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·내부통제협의회 설치·운영
 - 감독당국에 분기별 이행현황 보고·공시
- ③ (금융그룹 건전성 관리) 그룹차원의 자본적정성, 내부거래·집중위험, 계열사간 위험전이 등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·감독

- 또한 20대 국회에서도 동 제도의 법적기반을 확고히하기 위해 2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*되기도 하였습니다.

* '18.6.29 박선숙의원안, '18.11.16 이학영의원안 → '20.5월 회기만료로 자동폐기

-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규준과 제도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, 금융당국·금융회사의 축적된 경험, 국제정합성 등*을 충실히 반영하여 법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.

※ 현장점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, 금융연·자본연 등의 정책연구용역 및 세미나(20.1월), 금융그룹 CEO간담회(3차례), 금융그룹감독협의체(2차례) 등

- 입법예고 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상세내용 [☞ 참고](#))

- ① ‘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’ 중 ‘금융지주, 국책은행 등을 제외*한 금융그룹’을 감독대상으로 지정

* 부실금융기관, 경영 및 금융그룹내 각 업권의 자산자기자본 비중 또는 시장점유율 등 고려

- ②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, 그룹위험 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·운영토록 하며,

-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, 건전경영 등을 위한 ‘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’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·운영하도록 규율

- ③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·평가

- 금융그룹의 내부거래·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,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함

- ④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

-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경영개선계획(자본 확충, 위험자산 축소 등) 제출·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함

- 아울러 이번 정부안에는 지난 2년여 모범규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‘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의무’, 금융그룹의 ‘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’ 등을 추가하였습니다. (‘20.5월 모범규준 개정안에 반영)

※ 다만, 20대 국회에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포함된 사항 중 일부 규제는 국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음(예: 그룹내 금융사-비금융사간 임원 겸직·이동 제한,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법정(法定),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,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)

4

향후일정 및 추진계획

-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은 입법예고(‘20.6.5. ~ 7.15.(40일)) 후 관련 규제·법제 심사를 거쳐 ‘20년 정기국회(9월)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- 금융위원회는 향후 법안 논의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·마련하고,
-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.

< 금융 용어 설명 >

- 복합금융그룹 : 여수신 · 보험 · 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
- 그룹위험 : 동일그룹내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(전이위험),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(집중위험)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
- 내부통제 : 조직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사회 및 임직원 등 모든 구성원들이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로 내부감사, 위험평가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
- 위험집중 : 금융그룹이 직면하는 위험이 해당 그룹의 지급여력, 재무상황을 위태롭게 할 만큼 특정 거래상대방 또는 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

붙임 : <참고> 「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주요내용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www.fsc.go.kr>/정보마당/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가. 감독대상의 지정 등 (§ 5)

-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 중 다음의 3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감독대상으로 지정
 - i) 복합금융그룹(여수신·보험·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을 영위)
 - ii) 금융그룹 자산총액 5조원 이상
 - iii) 금융위로부터 인허가·등록을 한 금융회사가 1개 이상 소속
- 다음 3개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 가능
 - i)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
 - ii) 한국산업은행, 한국수출입은행, 중소기업은행
 - iii) 감독실익이 적은 경우 (부실금융기관, 경영 및 금융그룹내 각 업권의 자산·자기자본의 비중 또는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)

◆ 국제기준 유사례(복합금융그룹)

- ▶ **(Joint Forum감독원칙)** 은행, 증권, 금투업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
- ▶ **(EU지침)** 규제대상 금융기관이 그룹의 최상위에 있거나 또는 그룹내에 최소한 하나의 자회사가 규제대상 금융기관에 해당하고, 은행·증권부문(카드·캐피탈 포함)과 보험부문에 각각 최소한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보유

나. 대표회사의 선정 및 내부통제·위험관리체계 구축 (§ 8~13,18)

- ① **(대표회사 선정*)** 금융위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그룹 위험 관리정책의 수립 등 금융그룹 건전성 관리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이행토록 함

* 선정기준 :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 원칙 (단, ①최상위 금융회사가 불분명한 경우, ②최상위 금융회사가 제 역할을 하기 곤란한 경우, ③금융그룹의 요청으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회사를 달리 정할 수 있음)

- ② **(내부통제체계*)** 금융그룹 차원의 법령 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정책 수립, 대표회사 중심의 금융그룹 내부통제기구 운영

*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정책·내부통제기준 수립 및 내부통제협의회 신설 등

- ③ (위험관리체계)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는 대표회사 이사회를 보좌하는 위험관리협의회를 설치·운영

◆ 국제기준 유사례(대표회사 선정)

- ▶ (Joint Forum 감독원칙) 금융그룹의 건전경영에 대한 최종책임은 금융그룹 본사* 이사회에 있음
 - * 금융그룹 본사는 금융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경영하는 실체로서 최상위에 있는 금융회사(대표회사)를 의미(Glossary)
- (Joint Forum 감독원칙)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경영전략 및 위험 감수 성향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
- (Joint Forum 감독원칙) 금융그룹 본사 이사회가 그룹 위험, 내부통제, 내부 감사 및 준법감시업무를 전반적으로 책임질 것

- ④ (고객정보의 제공·관리 및 공동광고 등) 금융지주와 유사하게 소속 금융회사간 금융거래정보 등 공유*, 공동광고 및 시설 공동사용 허용

* 금융회사간 고객정보 제공을 허용하되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의무 부과

◆ 국제기준 유사례(고객정보 공유)

- ▶ (Joint Forum 감독원칙) 감독자는 금융그룹이 그룹내 기업간 및 금융그룹과 모그룹의 개별기업간의 정보 보고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함

다.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(§ 14~17)

- ① (자본적정성) 금융그룹수준에서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손실흡수능력(적격자본)이 최소 자본기준(필요 자본) 이상 유지되도록 그룹 자본비율 관리

$$\text{자본적정성 비율} = \frac{\text{적격자본 (자본합계 - 중복자본 차감)}}{\text{필요자본 (최소요구자본 + 그룹위험* 가산)}} \geq 100\%$$

* 전이위험·집중위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단일의 평가체제로 평가하여 등급을 산출하여 필요자본에 가산(기준은 하부법령에 규정)

◆ 국제기준 유사례(자본적정성, 필요자본 가산)

- ▶ (Joint Forum 감독원칙) 감독자는 위험집중·내부거래 등 금융그룹의 위험을 진달할 수 있는 건전성 기준을 설정해야 함
- ▶ (EU지침) 내부거래에 따른 자본 중복이용 제거
- ▶ (독일금융그룹감독법) 위험집중이 일정기준 초과시 추가자본 적립(세부기준 미규정)

- ② (내부거래·위험집중)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거래·위험집중이 금융그룹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측정·감시·관리*

*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의 일정금액 이상 내부거래(예: 신용공여, 주식취득)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회사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

- ③ (위험전이) 금융그룹은 금융·비금융계열사의 재무·경영위험에 따른 위험(동반부실위험)을 적절히 평가·관리해야 함

라. 금융그룹의 감독 등 (§ 19~29)

- ① (감독협의체)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금융그룹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 총괄부서와 업권 감독부서로 구성된 감독협의체 운영*

* 금융그룹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점검, 금융그룹 감독상 보완점 협의

- ② (보고·공시) 금융그룹은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에 보고하며 시장에 공시

- ③ (위험관리실태평가) 금융그룹의 위험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

* 은행·금융지주회사 등의 경영실태평가와 같이 2~3년마다 실시 예정

- ④ (벌칙 등)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, 제재조치 등 부과*

* (예) 금융그룹 재무상태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미보고·허위보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, 임직원이 고의·중과실로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주의·경고 등

◆ 국제기준 유사예(금융그룹의 감독 등)

① 감독협의체 운영

(Joint Forum 감독원칙) 관련법은 감독자들이 원활하게 그룹차원의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자간 협업·정보공유 관련 권한을 부여해야 함

(EU지침) 감독조정자 및 관련 주무감독기관은 적절한 조정협의를 해야 함

② 금융그룹 차원의 보고·공시

(Joint Forum 감독원칙) 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내부거래·위험집중, 익스포저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함

③ 금융그룹위험관리실태평가

(Joint Forum 감독원칙) 감독자는 현장감사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건전성기준 준수여부를 평가하고, 금융그룹의 위험평가를 위한 권한을 갖추어야 함

(EU지침) 금융그룹의 구조, 자본적정성, 위험집중·내부거래 등 평가는 감독자의 업무

④ 벌칙

(EU지침) 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또는 조치 가능

마. 금융그룹 건전성 개선조치 (§ 24)

-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,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, 재무상태가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, 금융위는 대표회사에 금융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부과

* 금융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취약성 개선만 주문 (예: 그룹 자본비율 개선 등)하고, 금융그룹 스스로 구체적인 방안(예: 증자, 위험 자산처분, 내부거래 축소, 위험집중의 분산, 위험관리체계의 개선 등) 선택

※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개선조치 (제24조③~④)

- 금융그룹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금융 시장의 안정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
→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그룹 명칭 사용중지, 경영개선계획의 제출·수정·보완·이행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
-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제출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부실하여 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→ 개별 금융회사에 증자, 위험자산 처분 등의 건전성 개선 조치 가능(금산법상 적기 시정조치 준용)

◆ 유사예(금융그룹 건전성 개선조치 등)

- ▶ **(Joint Forum 감독원칙) 필요시** 감독자가 **적기시정조치** 등의 감독조치를 시행하고, **건전성 기준 준수를 촉구**해야 함을 명시
 - 또한 감독자는 **포괄적인 감독조치수단**(시정조치권, 업무제한권 등)을 **보유**하여 금융그룹의 위기시 **필요한 조치**를 취할 것을 권고
- ▶ **(우리나라 개별 금융회사 및 금융지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)**
 - (1단계) 경영개선권고
 - * 인력조직운영의 개선, 경비절감, 부실자산의 처분, 이익배당 제한, 특별대손충당금 등의 설정 등
 - (2단계) 경영개선요구
 - * 조직의 축소, 위험자산의 보유제한·처분, 자회사 정리, 임원진 교체 요구, 영업의 일부정지 등
 - (3단계) 경영개선명령
 - * 주식소각, 임원진 직무정지, 합병, 영업양도, 제3자 인수, 6월 이내의 영업정지, 계약의 이전 등